

‘생활’에 대한 성찰

정진성 _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일본의 불황은 이제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전후 처음 경험하는 이상 사태에 일본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였다. 2000년대가 시작될 무렵,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장기불황은 2000년을 넘기고도 계속되었다. 미약하지만 회복추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다시 주저앉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에서는 긴박한 위기의식보다도 일종의 체념과 같은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이번 특집 “‘잃어버린 20년’과 일본인의 ‘생활’”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있는 장기불황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이란 대단히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지만, 특집에서는 우선 ‘먹고사는’ 문제, 즉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적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후 석유위기 시의 일시적인 정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던 일본인의 살림살이가 장기불황이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특히 주목하

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살림살이의 축소나 씹씹이의 변화만이 아니라 '격차의 확대'라든가, '빈곤'과 같이 장기불황기에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관심은 단순히 경제생활의 현황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생활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주체적 대응 양식의 변화도 우리의 관심사이다. 특히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생활문제가 일본의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에서 줄곧 가장 중요한 테마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생활'이란 단어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 또 운동 주체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통합된 총체로서의 삶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그러한 총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주체의 문제까지를 포함한다. 우리가 생활을 따옴표 안에 집어넣어 '생활'로 표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활 의미의 심화·확대는 단순한 학문적 세계에서의 담론과 사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생활문제를 붙잡고 활동하고 투쟁해 온 광범위한 시민운동(또는 주민운동) 속에서 형성·발전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생활'은 하나의 사상이다. '잃어버린 20년'은 '생활'을 둘러싼 시민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나아가서 '생활'은 21세기에 도 여전히 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이번 특집이 의도하는 또 하나의 목표이다.

이번 호에는 “‘잃어버린 20년’과 일본인의 ‘생활’”이라는 특집주제하에 4편의 논문과 각각 1편의 시론 및 서평을 실었다.

장기불황하에 일본인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일본사회에서의 격차 확대이다. 양준호의 논문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은 바로 이 격차 확대를 문제 삼아, 고용 및 소득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관련 통계에 의거하여 살펴보고, 이와 같은 고용 및 소득 격차가 다

시 저축 및 교육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격차를 재생산하고 새로운 계층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저자는 고용 격차의 심화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또는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의 양극화 현상에서 찾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더구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대량의 저소득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 격차 발생의 요인으로서 저자는 '정리해고' 등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분으로 하는 '근로자과건법'을 들고 있다.

한편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구(저축 제로 가구), 생활보호가구 및 취학원조제도 수급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사회 저변에 고착화되고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격차사회'가 재생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과거의 '1억 총중류사회'로 일컬어지는 평등한 사회에서, 새로운 계층사회, 즉 일반 임금노동자를 중핵으로 하는 중류가 축소되고, 기업가와 고임금 노동자(뉴 샐러리맨)로 이루어지는 신부유층, 그리고 프리터(freeter), 니트(NEET) 또는 홈리스 등의 신저소득층의 증가에 따른, 부유층 및 저소득층이 비대화하는 계층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분석은 현재의 고용격차·소득격차의 중대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격차의 고정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새로운 계층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장기적 현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잃어버린 20년'간의 격차확대 상황과 그 귀결의 심각성을 여러 통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증하고 있지만, 필자의 결론에 선뜻 동의하기에는 조금 걸리는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정치경제학 분야의 연구 성과에 많이 의거하고 있는 반면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서 격차문제를 다룬 연구 성과에 대한 리뷰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논문의 분석이 격차확대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이어스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점은 후술하는 특집서평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은수미의 논문「일본의 고용전략 변화: 비정규직과 제2안전망」은 양준호의 논

문에서도 제기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은수미는 일본의 고용전략이 2008년 말부터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음을 사회안전망의 확충(고용보험과 생활보호 사이에 제2의 사회적 안전망 도입)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전략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저자는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문제의 심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에서 찾고 있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켰다는 인식을 특히 2008년 가을의 리먼쇼크 이후 정책당국에서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정책 전환의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경제위기라는 현상만으로 정책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고 대안을 확산시키는 행위자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반빈곤 네트워크’와 파견 노조 및 개인가맹 지역노조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0월에 결성되어 2008년 연말에서 2009년 연초에 걸쳐 ‘파견촌’을 운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한 ‘반빈곤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렌고(連合)와 같은 기존 노동조합의 태도 변화도 정책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기존 노동조합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고 정규직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정책 전환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력적인 활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전환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지적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책변화를 이끌어 냈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또 저자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나 파견법 개정을 규제‘강화’로 해석하는 것에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규제강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규제 완화·

강화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문제임에 대해,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로서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표준적인 이해일 것이다. 또한 파견법의 개정은 규제강화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기득권 삭감, 달리 표현하면 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즉 기득권자의 양보 없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박희숙의 논문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과 시민참가」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기존의 생활보장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생활보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민운동 측의 대응 사례(생활클럽생협이 주도한 ‘생활자’ 정치,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 개호보험의 성립과정, ‘파견촌’)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90년대의 생활문제에 대해 시민운동은 어떤 대응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저자에 따르면, ‘생활자’ 정치는 정체되고 생활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당사자주권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은 생활문제 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파견촌 사례는 현재의 고용보장적 생활보장시스템의 허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으로서, 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또는 지자체의 역할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당사자주권의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에서 계약과 선택이 중시되고 있고, 제도화만이 아니라 시민과의 협동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구축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문제에 대한 시민참가 사례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어떤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불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저자가 지적한 생활보장시스템의 네 가지 방향성이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 없이 나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란 귀에 익은 용어가 아닌, ‘생활보장시스템’이란 낯선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보장시스템은 “생활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되기 위해서 가족과 기업, 커뮤니티 등의 제도 및 관행과 정부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이 적합하게 결합된 전체”로서 정의되고 있다. 즉 단순한 소득보장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며 더구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제도적 시스템이 아닌 시민이 참가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의 주체적 노력은 생활보장시스템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일본 학계에서의 생활분석에 관한 ‘생활학사’적인 저자의 긴 설명은, 생활구조론에서부터 생활복지 및 생활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생활보장시스템이라는 문제설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한영혜의 논문 「일본 시민운동에서의 ‘생활’의 의미」는 ‘생활’이란 말이 범람하는 현재에도 ‘생활’이 여전히 체제에 대한 대립축으로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운동의 주체가 상이한 세 개의 시민운동에서의 ‘생활’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보여 주고 있다. 쓰루오카생협 운동은 ‘생활’을 ‘지역’을 토대로 하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적인 총체로서 파악하고, ‘협동’에 의해 생활을 방어하고자 했다. 시민을 주체로 삼은 베헤렌(平連) 운동에서는 ‘생활’이 ‘개인’, ‘자율성’과 결부되었다. 베헤렌의 ‘시민운동’에서 ‘생활’은 ‘사생활’과 동의어로서, 한편으로는 ‘정치, 조직, 전위’,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명분, 이론’과 대척점에 놓여 있다. 생활클럽생협의 경우, ‘생활’은 생산과 분리된 ‘소비’로 나타난다. 지역은 생산지점과 분리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지역 주민의 구체적 모습은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을 책임지는 전업주부층이다.

저자는 이 운동들이 ‘구조’(체제)에 의해 침해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 즉 구

조의 주변부에 놓인 소수자로부터 '생활'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운동의 주체와 추동력은 바로 그 '생활' 속에서 찾아진다고 한다. 세 운동의 주체들—노동자, 시민, 여성(주부)—은 서로 다른 축에 의해 주변적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며, 그 지점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하여 운동의 이념과 논리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균열의 축들이 발생하며 새로운 주변적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자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게 되면, 새로이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이—그들이 노동자이든 '생활자'이든—그들의 주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은 필연적으로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아마노 마사코(天野正子)가 '노동자'도 '국민'도 아닌 자율적 시민으로서만 '생활자'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아마노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생활자'를 규정함으로써 90년대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생활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민 활동의 혁신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이 여전히 체제 비판적, 개혁적 시민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논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저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9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 다양한 시민활동 및 운동의 심층적 분석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수진의 특집시론 「'잃어버린 20년'간의 일본인의 경제생활」은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일반 소비자들의 경제생활을 가계구조, 소비행동, 생활의식이란 세 측면에서 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가계소득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지출도 역시 정체 내지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장기간에 걸친 소득의 정체 내지 감소는 전후 일본인이 처음 겪는 상황이다. 소비행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가격지향이 강화되는 한편 일부에서는 고급품도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가격지향 강화는 소득 감소에 따른 합리적 행동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급품도 팔리고 있다는 점은, 한편에서는 소득격차에 따른 소비격차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니즈의 다양화,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등에 따른 프리미엄 소비 유형의 증가일 수도 있다. 소득 감소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주어, 20년간 생활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생활에 불만족인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의 경기에 대해서도 비관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진성의 서평 「'격차사회론'의 시사점」은 '격차확대'라는 현상에 대한 대조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다치바나키 도시아키(橋木俊詔)와 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의 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연구자의 의견이 날카롭게 갈리는 지점은 통계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확대가 실질적인 경제적 격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로 고령화 요인에 의한 '겉보기'의 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서평자에 따르면 격차확대를 둘러싼 현재의 논의 상황은, 통계상의 격차확대가 주로 고령화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연령계층 내 또는 가족형태별 그룹 내의 격차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특히 젊은 층의 격차확대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논의의 초점이 격차확대의 여부에서 빈곤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시장원리주의)가 격차확대의 요인인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견해는 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격차확대 대책으로 두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정책 및 교육의 강화이며, '경쟁제한'이나 '규제강화'가 아니라는 점에 서평자는 주목한다. 특히 격차확대 대책으로서 주장되는 규제완화는 왕왕 기득권익의 보호책에 불과하다고 하는 오타케의 주장에 서평자도 동의하고 있다.

이 특집서평은 양준호 논문과 은수미 논문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양준호 논문은 격차확대 자체를 전제로 하여 고용 및 소득격차가 격차확대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특집서평은 격차확대라는 사실 인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또 양준호 논문이 일본의 정치경제학 그룹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많이 의거하고 있는 반면, 특집서평에서 다루고 있는 저서는 모두 근대경제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특집서평에서 다른 규제문제와 격차

확대시정책의 관련은 최근 일본정부의 고용정책 변화를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는 은수미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별기고로서 신게 된 테사 모리스-스즈키의 논문은 2010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소천홀에서 개최된 바 있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기획 특별강연, “봉인된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의 ‘북한행 엑서더스’를 다시 생각한다”(Exodus to North Korea Revisited: The Repatriation of Ethnic Koreans from Japan)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강연의 전문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간 소책자로 출판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발췌 요약문을 이번 『일본비평』에 게재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2007년 출판된 저자의 저서 내용 중 쟁점이 되었던 일본정부 및 일본적십사(이하 일적)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토대로 새롭게 집필된 것이다. 재일조선인 귀국(복송)문제에 있어, 일본정부의 역할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일본 내에서 본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 논문은 이들 비판에 대한 저자 최초의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재일조선인 귀국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2차대전 후 일본이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입국관리조례를 적용함으로써 야기된 재일조선인의 불안한 법적 지위에서 귀국문제의 기원을 찾는다.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해 그들에게 입국관리조례 적용을 면제하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 대신 오무라 수용소 문제를 경감시키는 수단이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복지비용을 삭감하는 수단으로서, 재일조선인의 귀국(복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지적은 귀국문제에 대한 근원적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새로 공개된 일본정부 문서의 분석을 통해 저자는 일본정부가 북한으로의 대규모 귀국계획을 치밀하게 기획했으며, 이를 조총련과의 긴밀

한 협조하에 일적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귀국 문제의 실질적인 계획 및 수행에서도 일본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저자의 분석이 치밀한 실증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저자 주장에 대한 반박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 및 사회가 재일조선인 대량 귀국문제에 따르는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번 호의 연구논단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개성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세 편의 논문을 실을 수 있었다.

장경렬의 논문「지각의 인식론적 경계 위에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 「라쇼몽」과 「덤불 속」 및 이 두 작품을 한 편의 영화에 담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라쇼몽’이라는 기호가 가지는 의미를 ‘텍스트의 무의식’이란 개념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설에서의 ‘라쇼몽’ 또는 ‘덤불’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호해지는 공간, 혹은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문제시되지 않는 인식론적 기준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을 암시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라쇼몽은 위의 두 세계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고 모호해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세계가 만나고 이해가 시도되는 지점이기도 하며,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지점, 즉 의식의 중간 영역일 수도 있다. 저자의 논리전개는 정밀하며 결론 또한 흥미롭지만, 일본 학계나 서구 학계에서의 해석이나 수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약간 아쉬운 대목이다. 일본 텍스트가 일본 문학 전공자가 아닌 영문학자에 의해 분석되었다는 것은 일본 문학을 보다 넓고 다양한 시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자극적인 일이었던 만큼 무척 고무적이다.

김태식의 논문 「누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하는가」는 한국의 내셔널리즘과의 관계 속에서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정치의 한 측면을 밝혀 보고자 박정희 정권하에서 제작된 두 편의 한국 영화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누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하는가’(방점은 필자)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자는 박

정희 정권하에서의 민족과 반공을 축으로 하는 국민적 기억 만들기 속에서 영화 속의 재일조선인이 대한민국에 의해 구원되는 ‘반쪽발이’, ‘빨갱이’, ‘여성’으로서의 도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로 민족의 문제, 즉 한국(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 다뤄져 온 재일조선인을 대한민국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문제, 즉 한국-북한-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자의 시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의 획득은 아마도 저자 스스로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체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식민지에 관한 기억과 전쟁에 관한 기억이 교차하는 곳의 하나가 재일조선인”이라는 빠져진 저자의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에서의 재일조선인 표상에, 젠더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내셔널리즘에 내포된 모순, 즉 민족과 반공 사이의 모순을 품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인 천착을 기대한다.

김봉진의 논문은 ‘반일’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반일’에서 ‘역사 화해’로 넘어가기 위해 풀어야 할 사상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 긍정의 반일’에는 역사 극복과 화해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욕망과 조리(條理)가 담겨 있다. 즉 한국인의 반일은 타자 일본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풀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하면 반일의 내파(內破)를 위해 타자 일본과의 대화를 욕망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본이 해야 할 것은 반일을 ‘문제가 아닌 찬스’로 삼아 그것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화란 반일 속의 욕망과 조리에 응답하면서 양국 공통의 도리를 함께 지향함을 뜻하며, 역사 화해란 이러한 대화를 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공통의 도리란 무엇인가? 저자는 공통의 도리 자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대주의와 식민주의, 자국중심주의와 내셔널리즘, 오리엔탈리즘, 이원적 사고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론적 인식으로서 근대의 정과 부의 양면성을 분별하는 시각, 반식민주의, 삼원적 사고, 탈냉전적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이 ‘근대의 주박(呪縛)을 초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대해 역사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현실적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방법론적인 논의 이전에 역사화해를 위해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사상적 과제를 고민하는 저자의 자세는 존중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 논문에 대한 비판은, 양국 공통의 도리가 될 수 있는 도덕적 공명관은 무엇인지가 아직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두어져야 할 것 같다. 이 때문인지 근대의 주박을 초극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자칫 선언적이고 규범적으로 들릴 수 있다. 앞으로 역사 화해를 위한 보다 치열한 저자의 사상적 모색을 기대한다.

* * *

이번 특집을 기획하게 된 당초의 의도는 일본인의 ‘생활’이란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보자는 것이었다. 생활이란 단어가 편집자의 관심을 끈 것은, ‘생활’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한국과 일본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막연히 느꼈기 때문이다. 일본사회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생활’이란 단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다. ‘생활자’, ‘생활학’, ‘생활경제’, ‘생활대국’ 등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배리에이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생활 관련 용어들은, 일상적 용법을 넘어서서 하나의 학문적 범주(생활학, 생활구조론, 생활경제 등)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시민운동의 주체(생활자, 생활협동조합 등)로서 정의되기도 한다. 도대체 일본에서 ‘생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편집자의 일차적 관심사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생활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담론 분석이나 시민운동의 분석에 치우치게 되어 생활의 실체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생활을 둘러싼 담론이나 시민운동에서 다루는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각 시기의 시민운동에 있는 ‘생활’의

배경이 되는 생활—주로 먹고사는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편집자의 두번째 관심사였다. 그러나 각 시대별로 생활의 실상과 생활을 둘러싼 담론 및 운동을 분석하고 그 둘의 관련에 대해 탐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방대한 프로젝트로서, 한 번의 특집만으로는 도저히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번 특집은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기로 시기를 좁히기로 하였다. 특집 제목이 “‘잃어버린 20년’과 ‘생활’”이 된 경위는 이상과 같다.

‘생활’이란 테마에 야심차게 도전해 보았지만, ‘생활’과 기성정치와의 관련성,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집을 통해, 장기불황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확대 및 빈곤문제를 통계적 자료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검토할 수 있었고, 새로이 발생하는 생활문제에 대한 시민운동 측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생활’이란 시점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권위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집자로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생활’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이 큰 소득이었다. 소비자로 왜 소화되지 않고, 조직이나 체제의 부속품에 그치지 않으며 동시에 지역이라는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인의 생활’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일본 학계의 문제의식과 시민운동은 인상적이었다. ‘잃어버린 20년’이 제기한 생활의 문제들—격차의 확대, 빈곤의 심화 등—을 배경으로, 생활정치, 서민정치 등의 용어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의미를 성찰해 보는 것은, 생활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평해 본다.